‘역대급 폭염’ 예고 속 폭염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 완산구, 9월까지 공공시설물·위생·복지 분야 폭염 대응 총력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국승철)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완산구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도로와 쉼터 등 공공시설물과 위생·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폭염특보 발효 시 주요 도로 33개 노선에 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살수차 6대를 동원해 도심의 열기를 식히는 ‘도로 쿨서비스’가 추진되고, 신호를 기다리거나 주요 보행지역을 지나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239곳에서 그늘막을 운영한다.

또한 구는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도 운영한다. 완산구 권역의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138개소와 노인복지관 5개소, 공공시설 49개소 등 총 194개소이다.

구는 폭염 기간 원활한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23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9개 동 138개소 경로당 무더위쉼터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냉방기 및 시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구는 야외에서 더위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백로공원 등 총 18개 공원에서 분수대 및 수경시설을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분수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 1일 8회 운영되고, 물놀이터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분수와 물놀이터는 50분 가동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운영되며, 구는 주 1회 정기 청소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동시에 구는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위생 점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는 25개 어린이집에 대해 식중독 예방점검을 실시했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77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300곳에 대한 식중독 사전 예방진단 컨설팅도 완료했다.

여기에 구는 사회복지시설과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예방 점검을 추진하고, 횟집, 냉면·소바 전문점 등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식중독 사전 예방진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여름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폭염은 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인 만큼 선제적 대응과 현장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로 살수, 무더위쉼터 운영, 식중독 예방 활동 등 폭염 대응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단속 강화

전주시 완산구, 15~30일 시민 안전 확보 위해 집중 단속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국승철)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완산구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위협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서부신시가지와 서신동 상가밀집지역, 전주한옥마을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과 중산초·서문초·화산초 인근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는 이 기간 중 주요 구간 내 현수막 게시와 현장 안내 활동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이동식 단속 차량과 자전거 순찰대를 활용해 현장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이다.

이 구역들은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을 통한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위반 차량을 촬영·신고하면 별도의 사전 계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다.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2만5000여 건으로 완산구 전체 단속 건수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2만1000여 건, 2024년 2만2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중 ‘인도’ 위반이 9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7516건)와 교차로 모퉁이(5959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절대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절대금지구역은 단순한 주차질서 문제가 아닌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이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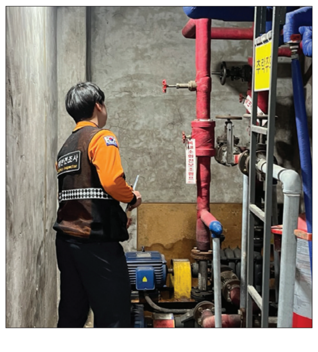
전주덕진소방서, 자원순환시설 화재위험요인 집중 점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자원순환시설 화재를 예방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0일까지 관내 자원순환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의 재활용·처리·감량화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 폐기물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보관하거나 소각설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장시간 연소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특히 열 축적에 의한 자연발화가 빈번하고 동일 시설에서 화재가 반복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덕진구 내 일부 자원순환시설에서도 최근 10년간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관내 자원순환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주요 추진사항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상 2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 안전컨설팅 △종사자 안전교육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합동소방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화재예방 홍보 등이다.

화재안전조사에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와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한 현장 안전컨설팅을 통해 최근 화재사례를 공유하고 하절기 자연발화 예방을 위한 폐기물 분리 적재와 적정 보관량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을 교육하고, 전주시 환경 관련 부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화재 발생 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 화재 발생 시설을 중심으로 합동소방훈련과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과 가연성 물질이 다량 적재돼 있어 작은 부주의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시민강사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탄소중립 시민강사 역량 강화

전주시, 보수교육 진행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탄소중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써온 탄소중립 시민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도왔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시민강사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 대상 탄소중립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교육 첫날에는 ‘지질학자가 본 기후변화(탄소중립)’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교안 수정에 대한 강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 현장의 개선 사항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둘째 날에는 ‘어류학자가 본 기후변화(생물다양성)’를 주제로 한 강의와 강사단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오는 9월 시민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안 콘테스트를 운영해 기존 교안을 보완하고 신규 교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탄소중립 시민강사들은 행정기관과 경로당, 교육기관 등 다양한 현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교육은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 기관 등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063-281-2750) 또는 전자우편(kjp18512@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관학교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문화 거점인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나섰다.

시는 11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공·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활동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관학교’를 운영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도서관학교’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교육은 독서동아리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작은도서관 내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작은도서관웃는책’의 관장과 활동가가 강사로 초청돼 ‘작은도서관, 책으로 만나다: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이야기’를 주제로 △작은도서관 내 독서커뮤니티 필요성 △독서동아리 운영준비 △주제별 독서동아리 활동 사례 및 성과 등을 소개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전주시평생학습관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는 11일 전주시평생학습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용철 위원장 등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평생학습관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

또 공연장과 정보화교육실, 강의실, 도예실, 스튜디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 보완점 및 안전 등을 점검했다.

최용철 위원장은 “평생학습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전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